

코로나 이겨낸 양국협회, 한·일 합동세미나 5월 30일 개최

2022년 잠정 연기된 이후 올해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열려



2017년 일본에서 열린 한·일 합동연수회에 참석한 양국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2014년 한국에서 열린 한·일 합동연수회에 참석한 양국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일요저널 발행인)를 추대한 바 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최종 일정 및 예산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협회 사무국은 합동세미나 프로그램에 대해 대주제로 '전문신문의 미래발전 전략'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 △종이신문의 구독감소와 격변하는 정보환경에 전문신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등을 소주제로 선정해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대상은 회원사 대표 및 발행인으로 참가비는 일반회원은 30만원이고 임원사는 10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협회는 일본전문신문협회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양국의 전문신문에 대한 정보 교류와 친목을 다져왔다.

이후 2000년을 기점으로 더 발전된 교류를 위해 한·일 합동세미나(한·일 합동연수회)를 개최해 양국의 전문 언론 산업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폭 넓은 관계를 이어갔다. 합동세미나는 5년마다 양국 협회가 각 1회씩 주기를 두고 개최해왔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행사안내

2024 한·일 합동세미나 개최 안내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택)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일본전문신문협회(이사장 이리사와 토오루)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2024 한·일 합동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부터 명칭을 기존 '합동연수회'에서 '합동세미나'의 형태로 변경하여 열리며, 그동안 매 5년을 주기로 양국 협회가 각 1회씩 개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한국협회에서 일본협회를 초청하여 진행될 계획입니다.

많은 회원사분들께서 참가하시어 양국의 전문 언론 산업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폭 넓은 관계를 이어가는 교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 일시 : 2024년 5월 30일(목)~5월 31일(금)
- ◆ 장소 : 경주 코모도 호텔
- ◆ 참가 대상 : 회원사 대표 및 발행인(대리참가 가능)
- ◆ 문의 : 02-334-7251~2(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

사고

가독성 높이기 위한 본문 크기 변화

전문신문협회보는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보다 폰트의 크기를 키우고 자간 및 행간을 조정했습니다. 본 협회보는 앞으로도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개편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간전문신문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존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납본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대학 및 학회지, 정부간행물) 등
- ◆ 제출시기 및 부수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 ◆ 제출처 :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한국전문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이 어려우신 신문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우편 및 방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문의 ☎ 02-334-7251~2

가스신문·명예기자단, 창간 35주년 기념 해외합동연수

가스신문

가스신문(발행인 양영근)이 창간 35주년을 맞아 한국가스신문사 임직원과 명예기자단이 해외 합동연수를 통해 가스산업의 발전방향을 분석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가스신문 임직원과 명예기자 등 총 50명은 지난 15일부터 18일 필리핀 마닐라 센추리파크호텔에서 35주년 기념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16일 세미나는 ‘한국의 가스산업(분야별) 최신동향 분석’과 ‘필리핀 이해하기’로 나눠 진행했으며, 7명의 가스신문 기자들이 심층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최신 자료를 공유하고, 국내 가스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교환했다.

한국가스신문사 양영근 대표는 “가스신문이 창간 35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전국 각



지에서 가스산업에 종사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전국 107분 명예기자들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가스신문 명예기자들의 가감없는 조언과 의견을 토대로 국내 가스업계의 주요 이슈를 살피고, 보도하는 전문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스신문 명예기자단 김명오 단장은 “35주년을 맞은 가스신문은 국내 유일의 가스업계 전문신문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전

국의 명예기자들과 함께 국내 가스업계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합동연수 기간 가스신문 임직원 및 명예기자단은 합동세미나 뿐만 아니라 필리핀 팍상한 폭포, 히든밸리 온천, 마닐라 바실리카 성당, 어거스틴 성당, 필리핀 혁명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호세 리잘의 기념탑이 있는 호세 리잘 공원 등 필리핀의 명소를 방문함으로써 필리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세미나

식품음료신문

식품음료신문(발행인 이군호)이 식품안전상생재단과 공동 주최한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세미나가 지난 21일 양재동 aT센터 창조룸I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산학계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로 참석, K-푸드의 역량 강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발행인의 개회사와 식품안전상생



재단 김민규 사무총장의 환영사 및 재단 목적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가 사회자로 전체 진행을 맡았다.

이후 주제발표는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K-FOOD 세계화를 위한 수출지원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신재

욱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센터장이 ‘식품안전 이슈로 본 재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검사관리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매 발표가 끝난 후 각 주제와 관련한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신행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자”



밀교신문

밀교신문(발행인 도진 정사)을 발행하는 대한불교 진각종은 지난 15일 서울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과 통리원장 주석처인 해원심인당, 울릉도 금강원 총지심인당, 미국 LA 불광심인당, 전국 각 교구청을 비롯한 국내외 심인당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탄했다.

이날 경정 총인예하는 봉축법어를 통해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세상살이 어디나 안락의 처소이니 마음 맑은 사람은 이 이치 깨치고 눈 밝은 선남선녀 그도 리 밝혀서 지금 이 곳에 장엄국토 펼쳐가자”며 “은혜의 큰 품으로 다 모여 열사 안고 주고받는 넓은 삶을 살려내어 오신 뜻 깊이 새겨 평화를 수놓자”고 설했다.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주석처인 해원심인당에서 봉행된 법요식에서 “마음의 평화는 올곧은 신행으로 자기를 확립하면서 스스로의 주인공으로 당당할 때 찾을 수 있다. 행복한 세상은 더불어 살려는 마음으로 나누는 실천행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수행을 다시금 점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옳이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이웃, 사회를 정화하여 온 인류가 더불어 잘 사는 정토를 만들자”고 전했다.

앞서 진언행자들은 강도발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화해와 화합을 으뜸 서원덕목으로 삼고 아이와 청년들의 꿈이 가득한 나라, 갈등과 반목이 식재되어 서로가 경애하는 나라, 청정한 대자연 속에서 모든 생명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발원



불교신문

불교신문(발행인 진우스님)을 발행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발원하는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지난 15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서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올해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개발한 총무원장 진우스님 선명상 프로그램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진우스님이 직접 지도한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프로그램에는 스님의 평소 가르침의 요

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 집중해 명상하다보면 부처님께서 설한 인과법과 연기법의 핵심을 체득할 수 있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육법공양과 불자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도 전통적인 ‘육법공양’의 의미를 되살려, 등, 향, 꽃, 차와 과일, 쌀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모두 갖추어 부처님 전에 올렸다. 무엇보다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며, 불자 장애인과 이주민들이 육법공양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올해 불자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최영철(작곡가), 고광록(변호사), 임혁(배우), 김동준(가수 겸 배우)씨에게 상패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구본길(펜싱선수) 씨는 훈련 중으로 어머니 선포복 씨가 대리수상했다.

세무사 역할 홍보 TV·라디오 광고 전격 개시

세무사신문

세무사신문(발행인 구재이)을 발행하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상파 TV·라디오, 전국 LED 전자게시대 옥외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MBC, SBS, IPTV(Btv) 방송을 통해 ‘세금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체크!(Check)’ 슬로건으로 15초 분량의 TV CF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해당 광고를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는 비전문 세무플랫폼 말고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의 1:1 전문서비스를 통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TV광고는 MBC 8시 뉴스데스크, 100분 토론 프로그램과 SBS 오뉴스, 8시뉴스, 생방송투데이, 돌싱포맨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 사이에 5월 중 총 64회에 걸쳐 송출되며 자세한 방송편성표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디오 광고 역시 같은 주제로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중파 라디오 방송(SBS 파워FM(107.7MHz), 러브FM(107.7MHz), KBS 쿨FM(89.1MHz), 해피FM(106.1MHz) 등의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송출된다.

해당 라디오 광고는 SBS 두시탈출



컬투쇼, 김영철의 파워FM, 최화정의 파워타임, 황제성의 황제파워, KBS 조정식의 FM대행진, 박명수의 라디오 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이현우의 음악앨범 등 청취율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 및 인기프로그램에 편성해 방송된다.

뷰티 라이징 스타 ‘플렌티플랜트’

화장품신문

화장품신문(발행인 함용헌)은 “화장품신문의 ‘뷰티 라이징스타에 플렌티플랜트가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라피끄의 플렌티 플랜트는 ‘업사이클 뷰티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다. 브랜드명인 ‘플렌티플랜트(Plenty Plant)’는 많은 식물들을 가리키는 단어다. 라피끄 이범주 대표는 “식물의 힘을 믿고 있다”면서도 비건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그만큼 비건보다는 업사이클에 무게를 두는 브랜드다.

화장품신문 라이징스타선정위원회 김주덕 위원장(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원장)은 “이번 라이징스타에는 다양한 브랜드가 신청했는데 우

리 화장품 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성분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플렌티플랜트가 단연 눈길을 끌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우리 고유 소재인 인삼을 주 콘셉트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와 상표 등록이 돼 있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이번 본선에 오른 브랜드는 4개였다. 4개 브랜드에 대한 심사는 라이징스타 선정위원회가 했다. 김주덕 위원장,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류보미 선임연구원, 롯데홈쇼핑 뷰티 팀 MD 임주리 대리, 본지 편집국장 김혜림 상무이사가 맡았다. 화장품 성분 분석 전문가 피현정 유튜버(디렉터파이)는 불참했다.

심사위원들은 브랜드의 장래성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 상품성, 독창성, 성분 및 효능, ESG 경영 등을 살펴 평가했다. 이번 라이징 스타는 지난해말부터 4월 말까지 공모를 받았다. 화장품신문 기자들이 1차 심사를 했다. 예선에선 특히 특허 인증 등의 관련 서류를 검증했다.

‘이달의 뷰티 라이징스타’는 30년 역사의 화장품신문이 중소 유망 뷰티 브랜드를 발굴해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협회, 5월 전문신문 건강걷기 개최



이번달 열린 '전문신문인 건강걷기'에 함께한 회원들이 트레킹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신문산우회(회장 양영근)가 ‘전문신문 건강걷기’ 네 번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4일 진행했으며, 한국전문신문협회 김광택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에서 모여 도심 속의 천년 고찰 ‘봉은사’와 강남 도심 속의 세계문화유산 ‘선정릉’의 한적한 숲길을 산책했다. 이번 트레킹 코스는 양영근 회장이 안내하며 회원들과 소통했다.

다음 일정은 6월 8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코스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서 집결해 강북도심 속의 숲길(금호산 응봉친화 숲길-매봉산 치유의 숲길)을 걸으면서 ‘서울시 우수 조망명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문신문 건강걷기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협회 사무국(02-334-72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미래 선도 물 관리 기술 및 물 관리 우수지자체 참여

환경타임즈

환경타임즈(발행인 유철)는 ‘제18회 물과 건강 포럼 및 전시회’를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에서 개최했다. 전시회는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번 포럼은 ‘수도관리 선진화 및

물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앞으로 발전방향 그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지자체에 적용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술 및 사업과 관련 중소기업 물 기술을 소개했다.

아울러 포상식에서는 물 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창녕군, 담양군 등이 각각 선정됐다. 아울러 물 관리 최우수 기관(기업)에는 케이워터기술주식

회사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물 관리 우수 개인(국회 물포럼 회장 표창) 표창에 김재규 대양환경기술 대표이사, 김영상 한영계기 대표이사, 오세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관리과 등이 수상했다. 이밖에도 환경부 장관상에 이수병 함평군 맑은물사업소, 김연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김종흙 진안군 상하수도과 등이 수상했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표창에는 장희정 하이클로 대표이사, 엄준석 토이코스 대표이사, 김영구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등이 수상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상에는 김동진 케이워터기술주식회사, 김민호 동인엔지니어링, 김정환 정희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협회보 칼럼모집

- ◆ 원고내용 : 각 산업별 이슈에 맞는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
- ◆ 대상 :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 ◆ 접수방법 :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kosna, 비밀번호 kosna [GUEST] 폴더 내 등록
메일 kosna1964@naver.com
- ◆ 문의 : 02-334-7251~2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가입 안내

■ 회원가입 자격 및 절차

- 가. 가입자격 : 전문신문(인터넷) 발행인·대표이사 또는 발행법인
- 나. 가입절차 : 입회원서, 발행인 카드, 회원사 카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입회비와 함께 본 협회 사무국에 신청.
- 다. 회비내역 : 입회비 - 700,000원
월회비 - 90,000원 *연회비로 선납시 5% 할인
- 라.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9-01-1135-182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신한은행 : 100-003-283205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 문의 : 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 ☎02-334-7251~2

■ 협회 주요사업

- 가. 협력업체를 통한 신문 제작, 편집, 인쇄, 발송, 홈페이지 관리 경비 절감
- 나. 전문신문 육성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다. 전문신문협회보 발행, 배부를 통한 홍보
- 라. 전문신문편집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
- 마. 정부공익광고·기업광고 수주 및 회원사 배정
- 바. 기자증 발급 및 취재편의 지원
- 사. 정기간행물 납본 대행 - 국립중앙도서관
- 아. 각종 캠페인 및 광고주/유관단체장과의 좌담회 개최
- 자. 경영인 세미나, 기자연수교육, 강연회 개최
- 차. 한국전문신문상 및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 카. 정기간행물 신규 및 변경등록 대행
- 타. 전문신문의 이행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농수축산신문 창간 43주년 사설]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정론직필을 지향하며 오직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매진해 온 농수축산신문이 창간 43주년을 맞았다. 농수축산신문은 지난 1981년 창간한 이후 43년 동안 농어업인들과 동거동락하며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물밑듯이 들어오는 시장 개방파고에 맞서 농어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어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 왔다.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을 비롯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제네바, 칸쿤, 홍콩 등 세계 각지를 현지 취재하며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농수축산업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의 진단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농수축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농식품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박람회인 ‘우수농수축산물산지소비자 한마당’행사를 실시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는 매해 11월 경 차년도 농식품유통시장의 변화와 방향을 전망해 보는 ‘농식품유통전망’을 실시, 업계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농수축산업계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파 속에 농어촌소멸이라는 큰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국내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1.8%인 118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앞으로 10~20년 후에는 농촌 10곳 중 4곳은 인구 2000명도 안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암울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농어촌소멸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차원의 총괄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다. 농어촌소멸은 비단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의 터전을 유지, 발전시키는 동시에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보전하는 일이며, 인접도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농어촌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 정주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교통여건이 좋아지면서 이동인구, 관계인

구가 증가하고 있다.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촌에 ‘청신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용기내서 찾아온 귀어농·귀촌인들이 농어촌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허무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스스로 위기 극복에 나서 다시 유입인구가 늘어가는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아직 사례가 많진 않지만 농어촌소멸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창간 43주년 특집을 준비하면서 이처럼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농수축산신문은 창간 43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정론지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약속한다.

[농수축산신문 창간 43주년 기획] 농산어촌 소멸위기 대안을 찾아라

위기의 농산어촌, 변화가 필요하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국가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현상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농어업 생산 위기, 농어촌 공동체 해체, 인접 도시의 연쇄적 쇠퇴 등 단순히 농산어촌뿐만이 아니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소멸 위기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방소멸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닌 과거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멸은 인구소멸과 맞닿아 있다. 이에 지방소멸을 언급할 때 출생율과 사망률, 그리고 고령화율과 같은 인구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5명,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 2020년 0.84명, 2022년 0.76명, 지난해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는 0.68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역시 2020년 전체 인구 5184만 명 중 15.7%가 65세 이상의 고령인이었으나 2040년에는 34.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율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50년 후인 2073년 총 인구는 현재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52만8000명에 이르고 100년 후인 2123년에는 현재 인구의 14.8% 수준인 759만 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 심각성을 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은 언제부터 부상했을까. 아마도 2021년부터 총인구 감

소가 시작되면서 위기의식이 보다 심화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소멸위험지수 발표를 통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1.8%인 118개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지방소멸이 사회적 이슈로 급격히 부상했다.

사실 지방소멸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서울·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 간 인구 양극화가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인구 증가에 대한 청년 유입 기여율은 78.5%에 달한 반면 인구가 감소한 호남, 대구·경북권 등은 청년 유출 기여율이 각각 87.8%, 77.2%에 달해 인구이동 중 청년층의 활발한 이동이 원인이 됐다.

결국 정부의 오랜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도농간·지역간 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10~20년 후 농촌 10곳 중 4곳은 인구 2000명도 안 돼

이처럼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소멸위험은 농산어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농촌은 이미 2010년에 고령화율이 20.9%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20년 기준 고령화율은 22.9%로 전국 평균 15.7%에 비해 7.2%포인트나 높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1970년대 전국 인구수의 57.8%인 1817만 명이던 농산어촌 인구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이촌향도(離村向都)’가 지속되면서 2010년 18.2%인 875만8000명까지 감소한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이도향촌’형 인구이동이 증가하면서 농산어촌 인구비중이 2015년 18.4%, 2017년 18.7%, 2020년 18.8%, 2021년 18.8%로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하지만 2000년



대 초반 이미 초고령사회 단계로 진입한 농촌이라 불리는 면 지역의 경우 2022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이 32.4%에 달해 향후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장래 전국·농산어촌 인구 변화를 전망한 결과 농산어촌 인구는 2020년 97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0년에는 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인구 2000명 미만인 읍·면도 2020년 전체 읍·면의 25.2%인 354개에서 10~20년 후에는 그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농촌,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융복합된 ‘기회의 장’으로 변화 시도

이 같은 변화에 정부도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농촌을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으로 그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갖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정책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청년 등 창업 기회와 농촌자원 활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경제 활성화, 농촌채류·교류 공간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주민·민간 협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나서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 각종 생활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정신문 창간 36주년 발행인 기념사]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는 책임감으로 국내 유일 행정전문지로서 역할 다할 터



주동담 발행인

존경하는 독자여러분!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정신문이 오늘에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

과 조언을 주신 독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신문은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신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신문, 시민의 이익을 위한 신문’이란 창간정신 아래, 오직 독자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행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시대의 유일한 대변지로서 어느 듯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10일 총선을 치러 오는 30일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

되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인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정치일정 속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어느 한 곳도 안정된 곳이 없다할 정도로 매우 엄중한 위기 속에 휩싸여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므로 저희 시정신문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항상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정통언론으로서의 책임과 품위를 중시하며 늘 깨어있는 정론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하나 되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여러분!

저희 시정가족은 항상 발로 뛰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올곧고 정정당당한 보도로 시정

신문만의 국내 유일의 행정전문지로서 특색을 살린 올곧은 신문을 제작, 참 언론의 길을 가는데 전 임직원이 합심해 혼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신문은 항상 깨어있는 기자정신에 더욱 충실하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사와 논설, 해설, 칼럼 등으로 퀄리티 저널리즘을 실천, 온라인과 모바일 등에서 수준 높은 정보로 소외된 이웃에 등불을 비춰 언제나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행정과 미래에 꼭 필요한 명품 행정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언론의 정도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정신문은 정당과 종파를 초월해 국민과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천칭 저울처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뉴스

를 지향하며 특정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오직 진실에 의한 기사로서 독자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저희 시정가족은 오직 독자여러분만을 바라보며 민·관의 가교역할과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 지방자치뉴스의 출발점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항상 창간의 초심으로 돌아가 불편부당함과 공정함을 견지해 국내 유일의 행정전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정신문을 몰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신문 창간 36주년 기획] 죽음으로 내몰린 공무원, 악성민원 해법 없나

막무가내 악성민원 연 4만6천건…우울증에 사망까지 후유증 심각

법령 또는 상식적 기준에서 처리가 어려운 악성민원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 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사 괴롭힘에서 시작돼 최근 경기도 K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는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상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는 공무원의 우울증과 진로에 대한 고민 등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며, 국가 행정력 낭비와 민원응대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시정신문은 창간 36주년을 맞아 악성민원의 사례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사례 1] 여권발급 늦었다며 1천만원 배상 요구=구청 여권관련과에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초년 시절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했다. 민원인이 A씨를 찾아와 다짜고짜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 언사와 함께 1000만원을 내놓으라며 소동을 피운 것이다. 중국과 교역업무를 하던 이 민원인은 여권 발급이 늦어져 사업상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이곳에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서의 최고직 공무원이 진화에 나섰지만, 민원인의 억지와 트집에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서야 소동이 겨우 진화됐다. A씨는 이후 한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휴직 후에 복귀했다.

[사례 2] 김장김치 못받았다고 한달간 전화 폭탄=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민원인으로부터 거의 한달여 간을 악성민원에 시달렸다. 당시 복지관련과에 근무하던 B씨는 매뉴얼대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김장김치를 배분했

다. 이로부터 몇 일 지나지 않아 한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민원인의 부모가 작년에는 김장김치를 받았는데, 올해 왜 안주느냐는 항의였다. B씨가 조사해보니 민원인의 부모는 대상자가 아닌데, 작년에 양이 남아서 제공된 것이었다. B씨는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민원인은 막무가내였다. 상급 공무원이 나서서 겨우 진화했지만, 민원인은 날이면 날마다 B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업무를 방해했다. 공직이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해왔던 B씨는 진로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악성민원은 '20년 4만6000건, '21년 5만2000건, '22년 4만1600건으로 연평균 4만6000여건에 이른다. 폭언(3만6000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협박(3800건), 성희롱(4400건), 폭행(360건), 기물파손(70건)이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며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돼는 불통형 민원인부터 대량민원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 “내가 누군데”로 시작하는 사칭형 민원인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공통점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 학연·지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어 공무원을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사과로 끝나면 다행이고, 경찰관이 출동해서 마무리되면 정상으로 생각될 정도다.

악성민원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악성민원에 시달린 기억이 있을 것이라는 어느 공무원의 자조섞인 말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공무원 신분상, 악성민원은 어찌든 공무원에게 숙명과도 같은 존재라는 푸념도 나온다.

악성민원을 겪고 나면 우울증 등 정신적 충격은 물론, 휴직과 면직 등 다양한 후유증도 동



반한다. 가깝게는 경기 K시의 소위 ‘좌표 찍기’로, 멀게는 2018년 경북의 한 면사무소에서 엽총 난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9%가 악성민원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1%가 모욕성 전화와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7%는 악성민원의 발생 원인으로 공무원 보호장치와 제대로 된 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악성민원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장에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5월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6일엔 그 후속 조치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 발표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시 기관차원의 대응이 가능하고, 욕설 등이 섞인 악성민원 전화는 중간에 통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악성민원에 대해 좀 더 강도 높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먼저 청원경찰·보안관 등과 같은 보호 인력

의 확대다. 현재 청원경찰제를 도입 중인 여러 자치구에선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면 보호 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주로 저연차 공무원이 배치되는 민원창구에 고연차 공무원을 배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 민원창구엔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 주로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 대부분이 남자보다 여자, 고연차보다 저연차 공무원에게 그 정도가 심해 문제가 된다.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감정노동자를 존중하자는 캠페인처럼 민원 전화에 민원응대 공무원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안내메시지를 답자는 것이다.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동적 대응으로 악성민원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과 호주·뉴질랜드는 악성민원인의 연락·방문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안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으로 공무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는 훈훈한 민원창구 모습을 기대해본다.

[가스신문 창간 35주년 특집] 의료용산소,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마셔도 되나

“어떤 산소를 마시겠소”... 발생기 산소의 품질 ‘신뢰성 의문’

우리는 ‘산소’라고 하면 매우 청정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요양병원 등에서 산소발생기를 통해 환자들이 마시는 산소의 품질은 과연 믿을 만할까.

의료용가스공급업체들은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를 통해 공급되는 산소의 경우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

으며, 공기분리장치(ASU)를 통해 제조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 엄격하게 관리하는 산소와 비교해 품질이 확연하게 떨어지므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환자라면 어떤 산소를 마시겠소. ASU플랜트를 통해 액화공정방식으로 제조해 GMP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 산소를 마시겠습니까, 지하실이나 주차장 등에 설치해 먼지가 뿌연게 쌓인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로 제조한 산소를 마시겠습니까?”

두 가지 의료용산소의 품질 차이를 잘 아는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의 질문이다. 의료용가스사업계 종사자들은 의료용산소 품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균형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를 통해 제조한 산소의 품질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에 대한 규제 완화는 산업부가 2019년 2월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의 한 산소발생기공급업체가 임시 허가를 신청한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에 대해 정식허가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추진됐다.

산소발생시스템의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품목 허가’와 관련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이 담당했으며, 이후 식약처와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가 만나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규제샌드박스의 거센 물결에 떠밀려 결국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품목’으로 허가했다.

ASU플랜트를 통해 액화공정방식으로 제조한 의료용산소의 품질은 농도 99.5%로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에서 나오는 산소의 경우 93%도 의약품으로 인정해 보험약가를 적용한다니 이것이야말로 형평성 위배라는 것이다.

의료용가스사업계에서는 산소발생기에서 나오는 산소의 농도가 93%라고 하나 필터를 제때 교환하지 않거나 특히 노후된 발생기의 경우 산소의 순도 유지가 우려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전력피크 차단 등으로 인해 산소발생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매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큰 단점이다.



불량산소는 주로 중증 환자가 마셔

정부가 중앙집중식 산소발생시스템을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품목으로 허가했지만 정작 챙겨야 할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 등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어렵게 됐다.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ASU플랜트를 통해 제조한 산소를, GMP에 따라 관리한 고품질의 산소를 구매,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요양병원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를 설치, 대부분 중증 호흡기환자 등을 대상으로 산소를 처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용가스사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어째서 품질을 보증하기 힘든 산소발생기의 저순도 산소를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산소발생기의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품목 허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의료용가스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ASU 플랜트를 통해 제조한 산소의 품질과,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로 제조한 산소의 품질을 동일 선상에 놓고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품질과 관련한 이중적 잣대를 내놓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제 제기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경기남부지역 의료용고압가스업체의 한 관계자도 “의료용산소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지하실, 주차장 등에 산소발생기를 설치, 제조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오염이 많은 곳에서 제조한 산소를 환자들에게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생기 산소의 순도 점검, 필터 교환 여부 등 관리·감독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ASU플랜트에서 제조한 산소의 순도와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몇몇 요양병원의 원장들이 산소발생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호흡기환자는 대부분 중증인 경우가 많아 산소포화도 등과 관련해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등 여기에도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나서 ASU플랜트에서 제조된 산소인지, 중앙집중식 발생기에서 나온 산소인지를 잘 가려낼 수

[가스신문 창간 35주년 발행인 기념사]

가치 있는 정보, 같이 읽는 신문



양영근 발행인

항상 존경하는 가스신문, 수소뉴스 애독자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가스라는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전문신문이 여기까지 올곧게 성장해 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만,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완숙한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적인 요소가 증폭되고 있는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 담보하고 있는 우리 가스산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환희에 찬 축하연보다는 벅찬 감회를 안으로 삭이며 조용하게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다수의 에너지전문가는 세계 가스산업의 전망을 2050년까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국내 가스시장의 저성장추세와 불투명한 미래비전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내수경기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스업계는 현명하게 오래 전부터 고객관리와 안전관리를 보다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충실하게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다방면에서 신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부단히 해 왔던 만큼,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35년동안 가스인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해 왔던 가스신문 역시, ‘가치 있는 정보, 같이 읽는 신문’을 지향하며 가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설 각오를 다집니다. 정보의 범람 속에서 진정한 정통 전문신문의 사명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

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문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애용할 뿐, 많은 사람은 휴대전화로 보는 카드뉴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상으로 접하는 찰나의 소식은 자극적이고 사실이 아닌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한 갈증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가치있는 정확한 정보를 갈구하는 IT세대인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전문신문은 AI시대에 부합하는 가장 믿음직한 알고리즘이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래왔듯이 가스신문은 감히 가스산업계의 대표 지성을 자임하면서, 가스산업이 그 기반을 유지하고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편집 방침을 변함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만 던져놓은 채 그 해결 과정에 대한 감시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의 나태와 독선을 제대로 제어해 왔는지, 오늘 저희들은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고 보다 겸허한 자세로서 창간 당시의 순수했던 열정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가스신문을 이렇게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반듯하게 키워주시고, 도와주신 애독자·광고주님과 가스인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이 힘을 때마다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던 전국 107만 명에가자 은혜를 늘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화사한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내내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있도록 안내하고, 환자들이 좋은 품질의 산소를 마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산소발생기 편법사용, 화재도 유발

산소발생기는 화재 등의 사고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김포의 한 요양병원 화재 사고도 산소발생기를 통한 산소공급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문제는 산소발생기 1기와 서너 개의 산소용기를 매니폴드(Manifold)에 연결, 사용하다 일어난 이 같은 화재 사고가 지난 2016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있었다는 것이다.

수도권 의료용가스공급업체의 한 관계자는 “산소발생기를 병원 내 의료용가스공급장치와 연결해 사용하는 형태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이 같은 방식의 가스공급은 불법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나서 하루속히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소발생기에 무분별하게 백업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화재 사고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현재 가동하고 있는 산소발생기의 외부는 물론 내부를 뜯어보면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 전기로 인한 화재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부지역 의료용가스사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

는 “발생기에서 나오는 산소는 90~95% 수준이므로 10% 가까이 불순물이 존재한다”면서 “불순물 가운데 유분 또는 먼지가 존재하다가 단전 등으로 인해 백업시스템으로 전환 때 용기에 충전된 고압의 산소가 공급되면서 배관 내 유분 또는 먼지와 마찰열로 인해 폭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소의 경우 유분과 쉽게 반응하고, 압력조정이 또한 용도에 맞는 제품으로 선정, 부착해야 한다. 배관도 동이 아닌 재질을 사용하는 등 부적합한 제품 및 시공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기서부지역 요양병원의 한 가스구매담당자는 “요양병원 원장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가스를 설치, 사용하려고 해도 규제가 많아 공여지책으로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라면 호흡기 환자들에게 GMP를 통해 관리한 고품질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시스템은 품질도 떨어지고 화재 등 사고에도 취약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왜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품목으로 허가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은 어째서 손을 놓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살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기자 수첩

거제시청 공무원 기강해이 심각 대책마련 시급

내외뉴스통신 선정화 기자

거제시청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거제시민들은 거제시청 공무원 일탈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 댓글에서 “거제에도 공무원이 있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거제시 공무원 기강 문제를 놓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거제시 한 여성 공무원이 의류매장을 찾아와 점주를 향해 전자계산기를 들고 위협하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고 jtbk 인기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보도되자 이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유튜브 100만 뷰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고 무려 500개나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 내용에는 거제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강도높게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상남도 특별 감사반에 제보한 결과 거제시에서 자체 조사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뉴스에 오르내린 거제시 공무원 일탈관련 사건은 여러 개 있다.

지난 2020년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29)씨가 결국 파면됐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거제 시민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다.

이처럼 반복된 공무원 직무 비리에 두고 거

제시의 미온적 대처가 되레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거제시 공무원들의 비리근절을 위해 거제시는 2023년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특혜제공, 갑질행위 등’ 개선이 시급한 항목을 선정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부패 3무(無)운동’에 동참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결과에도 최근 몇 년 사이 거제시 공무원들의 일탈과 비리사건은 다른 시도에 비해 유독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다. 오죽했으면 경남도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거제시 종합감사를 실시했겠는가?

경남도는 10일간 가제시를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 소극행정, 예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 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비리와 일탈로 인해 관광거제 이미지 추락과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들의 좋은 평판에 먹칠을 하고 있다. 거제시청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특별한 교육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집사광익(集思廣益) 없는 의약행정은 독선(獨善)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끝없는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이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학의 궁극적 가치는 공익과 사회적 형평 및 복지, 정의,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의 행정 기조는 이념적 최고 가치인 공익과 갈등 조율보다 수단적 행정가치인 합법성과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에 더 치중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정부가 설계한 정책 방향에 이해관계자들이 따르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주요 정책 부문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 내용 중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항목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체계화 방안이 부족했던 것이 정책 평가에서 미흡한 원인으로 제기됐다. 또 성과지표 유형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부분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의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수많은 실무회의를 진행하지만, 회의체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정부

가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회의 역시 한국 글로벌의약품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 등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의견을 수용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안이 일방적으로 제시돼 제약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회의를 진행하면 쇠귀에 경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정도”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히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을 통해 정책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효과성과 생산성에만 매몰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 보다 정부는 정해 놓은 방향성에 맞춰 끌고 가려고만 하고 있다.

결국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은 반발하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만 양산하고 있다. 소통과 설득을 통한 집사광익 없는 행정은 소신이 아니라 독선일 수밖에 없다.

행정의 궁극의 가치인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보편적이고 형평에 맞는 공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모여지길 기대해 본다.



국산 의료기기 발전, 이제 영속성을 논의해야 할 때

의학신문 오인규 기자

오늘날 4차 산업혁명부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에 이르기까지 융복합 시대에 대표 주자로 의료기기 분야가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고령화 사회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중요 산업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국가가 매년 증가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의료기기가 수출하고 있고, 고용 성장 측면에서 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점과 새로운 벤처기업이 출현하기에 좋은 제품군을 가지면서 확장성도 무궁무진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세’라는 명사가 흔히 적용되는 다수 국내 기업들은 여러 위기요소들로 인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소통과 공유, 협업이 동반돼야 한다.

이를 극복하는 최적의 톨로 등장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국산 의료기기의 발전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로 충분한 가치를 주고 있다.

사업단의 대표 과제는 △의료기기 국산화 △의료 공공복지(사회문제 해결) △의료기기 수출 산업화 △세계 최초 의료기기 개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 개발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시장지향성으로 전주기 밀착 지원해 제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국산 의료기기 발전을 주도하는 동시에 현 주소를 인식하게 했다는 점은 사업의 가장 큰 성과다. 더불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양질의 브랜드를 가진 산업군의 성장은 곧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한다. 때문에 혁신은 단기간이 아닌 꾸준히 계속해야 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다.

사업단 출범과 일련의 활동을 통해 업체들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중요한 핵심은 의료기기 R&D가 영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5년에 종료되는 현재 사업단에 이어 후속사업의 기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2024년은 다양한 의료기기 R&D의 주제와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혁신적 기획안이 범부처 형태로 만들어지는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사업단에서 진행중인 각종 사업이 의료기기 혁신을 위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첫걸음이었다면, 후속사업을 비롯한 앞으로의 사업은 혁신을 완성하는 합찬 도약이기를 바란다.



‘공평’ 원했더니 ‘공멸’ 카드 꺼냈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지 사흘 만에 이를 철회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해당 방침에 대해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사례가 또 한 번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취지는 좋았다. 정부는 최근 C커머스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들의 반입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실제 KC 인증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제품이 사용상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제도이기도 하다. 제품으로 인한 사고나 상해 등을 수집, 관리해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K커머스와 해외 직구 플랫폼이 보다 공평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제도 이뤄졌다는 평가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들은 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 인증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문제는 이번 대응책은 공평이 아닌 ‘공멸’의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발

표 이후, 유통업계는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직구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의 모든 플랫폼들에 제동을 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공평한 경쟁을 위한 결정이 업계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정부의 정책 철회 결정으로 모든 것은 원점이 됐다. 정부는 지난 19일 KC 인증 의무화는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80개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발 물러서서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만 걸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차단하는 것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겠다고도 했다.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과 K커머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관건은 향후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가져오느냐’가 됐다. 시장 환경과 소비자 의견 수렴 등 철저한 준비 없이 급지와 철회를 발표해 큰 혼란을 야기한 만큼, 다음 대응책에 대한 시선이 더욱 날카로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 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국정 운영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10일 출범 2년을 맞았다. 이에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꾸려온 국정 운영에 대해 회고했으며, 남은 3년 임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각 산업별 전문신문이 바라본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 정리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내외뉴스통신

尹 기자회견, 엇갈린 평가...
“허심탄회” vs “동문서답”

내외뉴스통신(발행인 김광택)은 지난 5월 10일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장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했다”고 밝힌 반면 야권은 “동문서답, 맹탕회견”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주요 사안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도 소상히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씀이었고, 전반적인 생각과 기조에 대해 대통령과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문제에 답하는 것 아닌가. 동문서답”이라고 꼬집었다.

민중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나”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신의 SNS에 “마이동풍. 동문서답.오불관언”이라고 짧게 적었다.

■ 국제신문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 넘어
자본시장 직접 연관 문제”

국제신문(발행인 이한구)은 지난 5월 9일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장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 “이 문제는 1천4백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자본시장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강력한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금 완화와 관련해서는 ‘부자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민 중산층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세제지원에 대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 인선 시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내가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또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각 부처의 또 분위기도 바뀌고 또 더욱 소통하고 또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업인신문

“무시 농민·밀린 농민·
욕먹는 농민 만들어”

농업인신문(발행인 노만호)은 지난 5월 17일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되짚어 봤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110톤, 무 80톤을 지속 방출하고, 바나나,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5만톤 이상 도입할 계획. 배추·당근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비상경제차관회의’의 결의안은 윤석열정부 농정의 계속되는 특징이자 단면이다. ‘장바구니 물가’에 얹어진 현실 농업정책은, 흉작으로 소득이 없고 풍작으로 ‘로타리 처’도, 소비자 중심의 물량 방출만 가동되는 메커니즘을 구사한다.

윤석열 농정은 시대적 착오로 결론난 비교

우위론을 부활시켰다. 수입해서 시장에 쏟아놓는 것으로 농산물 가격억제가 가능하다는,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윤석열 농정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라는 규제 해제를 표방하고 있다. ‘직불금’ ‘가루쌀’ ‘쌀값’ ‘사과값’ ‘공간창조’ ‘청년농’ ‘스마트팜’ ‘수출실적’ ‘규제개혁’ 등의 윤석열정부 농정 키워드와 성과 기록은 일정부분 비슷하다. 하지만 이 속에는 ‘가격폭락’ ‘생산비 폭등’ ‘이농’ ‘난개발’ ‘인력난’ ‘소득감소’ 등 대책이 안보이고 무너진 현실이 파리를 틀고 있다.

윤석열 농정의 가장 큰 단점은 ‘농민을 간과하고 외피에 치중한 방향성’으로 진단된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졌던 윤석열 농정평가 토론회에서 한 토론 참석자는 “농사짓는 사람을 위해서 농민기본법·필수농자재지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민 3법을 요구하고 있으나, 스마트농·청년농을 내건 정부는 오히려 농민 요구를 적대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 메디칼업저버

의료개혁 추진 의지 밝힌尹

메디칼업저버(발행인 김관홍)는 지난 5월 9일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장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의료개혁 지지가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복안이 지난 30년 동안 사실상 없었다고 평가했다.

결국 자유 민주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탓에 개혁이 순탄히 이뤄지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2000

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료계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해 지난 1년간 협의가 매우 어려웠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에 생각한 로드맵에 따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개혁을 지지했다며, 이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사신문

“국민 목소리 더 경청하는 정부로
바꾸는 게 맞아”

시사신문(발행인 박상민)은 지난 5월 10일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장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변화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뭘었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민생에 있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국민들께 설명해드리고 소통하는 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가 국정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는 게 담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대해선 “시장경제와 민간주도 시스템으로 우리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그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설

저출산 심각한데 맞춤형정책은 언제쯤...

■ 농촌여성신문

미혼인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향후 결혼 의사가 없거나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 해본 적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10 중 9명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저출산 정책 이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만25~49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분석 결과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결혼 의향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낮았다. 다만 결혼 의향이 있지만 아직 미혼인 이유는 남녀 모두 결혼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 가사, 출산, 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였는데, 출산과 양육부담이 큰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일·가정 양립이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예게 큰 걸림돌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90.8%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반응은 그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정작 저출산의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는 미흡했다는 방증이다.

저고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과 출산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형식적인 조사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심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쳐야 할 것들을 세심히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 의학신문

윤 대통령, '의료개혁 로드맵대로 추진' 강조

의학신문(발행인 박연준)은 지난 5월 9일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장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로드맵에 따라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협의가 어려운 이유로는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며 의료계로 원인을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해당 질의에 윤 대통령은 "한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지난 3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나 싶다"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 의대정원 문제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 의사 인력 증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민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뤘었다.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대화가 난항을 겪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의 분열된 의견을 꼽았다.

■ 이뉴스투데이

윤 대통령 "민생 어려움, 마음 무겁고 송구"

이뉴스투데이(발행인 방재홍)는 지난 5월 9일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

장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 정책 성과와 소회를 전달하며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첫 마디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면서도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뻐기도 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지난 2년을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 중소기업뉴스

"남은 3년 기업성장 지원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할 것"

중소기업뉴스(발행인 김기문)는 지난 5월 13일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장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많이 부족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또한 지금이 우리에게 '하이라임'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만에 가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는 말로 국민 보고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한분 한분이 민생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을 지원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하는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고 메시지에서 '민생'만 14차례 언급하며 앞으로 남은 3년의 국정운영을 민생에 방점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한국대학신문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혁신정책 과제는

한국대학신문(발행인 홍준)은 지난 5월 13일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되짚어봤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과 '탈(脫)규제'를 키워드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키워드의 목표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동반성장이다. '탈(脫)규제' 키워드의 목표는 규제 완화로 대학의 자율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고등교육혁신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대학과 지역으로 옮긴 것이 방점이다. 2023년이 고등교육혁신의 씨를 뿌리는 시기였다면, 2024년은 고등교육혁신의 현장 안착 시기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혁신정책의 향후 과제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이원 발전전략을 제안했다.

국공립대는 교육부 책임하에 기초학문과 첨단학문에 집중하고 사립대는 메가시티 개념의

광역(특별)고등교육구로 구분, 광역(특별)고등교육청을 설치한 뒤 지역 산업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춰 육성하자는 것이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사회 각계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대학가도 마찬가지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고등교육혁신의 키워드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이 대표적이다.

■ 한의신문

"부총리급 기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할 것"

한의신문(발행인 윤성찬)은 지난 5월 9일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장을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부총리급 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육아를 위한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며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단독 |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해 벌꿀 작황 ‘최악’

“올해 벌꿀 작황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한마디로 재해 상황 수준일 정도다. 앞으로 양봉산업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최근 벌꿀 채밀 현장의 모습은 이 같이 우울하다. 남부권 지역(1차)부터 시작된 벌꿀 채밀 현장은 하늘을 원망하는 소리로 채워질 정도로 심각하다. 채밀 기간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양봉농가들에게 재난 수준처럼 다가 올 것이다.

특히 올해도 월동봉군 소멸 피해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기상 상황까지 농가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남부권 지역 채밀은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부권(2차)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국양봉협회가 올해 초 소멸 피해 조사를 한 결과, 전국 9개 지회 꿀벌 소멸 피해율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가당 절반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만회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날씨까지 농가들을 도와주지 않아 올해도 양봉농가 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민관합동 현장 조사’가 이뤄지는 중부권역인 충남 천안과 세종시 일원 양봉장에서 만난 양봉인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이곳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지연수 씨는 “올해 날씨가 너무 안 도와준다. 저 같은 경우 벌꿀 생산보다 화분매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주위의 농가들의 말을 들어오면 올해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 “꿀을 채밀할 때 비와 바람이 불면 꿀을 채밀하는 활동에 지장을 준다. 올해

작황도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위 농가들의 모습을 알려줬다.

실제 이곳에서 민관합동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올해는 전반적으로 아까시 꿀 생산량이 기대에 못 미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 봉군당 평균 꿀 생산량은 14~15kg이 나오는데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조사를 나온 농진청 관계자는 “현재 작황 상황이 좋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날씨의 영향 등으로 꿀 생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현장을 찾은 박근호 양봉협회장은 “올해도 근심 걱정이 크다. 날씨의 영향으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잦은 비 소식과 저온 현상으로 인해 아까시나무 꽃에서 정상적으로 유밀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하며,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재해수준이다. 남은 북부지역 상황도 살펴봐야겠지만 올해 벌꿀 작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도 양봉산업 미래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현재 양봉산업은 존폐위기에 서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을 정도로 암흑 그 자체”라고 설명하며, “특히 값싼 베트남 벌꿀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어 하루속히 이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러면서 “2029년에는 관세가 완전 철폐돼 값싼 수입 꿀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고품질 벌꿀 생산과 안정적인 밀원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벌꿀등급제’도 의무화 시키고, 양봉·밀원수직불제 등 정부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를 의식하고 농진청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와 벌통에 설치한 위치확인시스템(GPS) 자료를 기준으로 꿀벌 증식과 아까시나무 개화 현황, 아까시꿀 생산량 등을 분석해 양봉산업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 농축유통신문(5월 15일) 이은용 기자

관납 제도 이대로 좋은가



최근 들어 축사 환경개선 제품의 지방자치단체 관납 제도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축산 및 환경직 공무원이 퇴직한 후 축사 환경개선 제품 유통 관련 업체에 취업해 영업 활동을 하고, 관납 제도가 ‘도내 생산 한정 지원’이라는 규정을 이용해 지역 내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이 제품 유통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오랜 기간 축산농가의 축사 냄새 저감, 가축분뇨 처리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사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농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다양한 사업이 취지와 목

적과 달리, 일부 유통업자들의 편법 영업으로 인해 그 효과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도소매 전문업체는 전국에 판매망을 갖추고 축산 및 환경직 퇴직 공무원들을 영입해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영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2~3년 후에는 후배 퇴직 공무원에게 자리를 물려주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영업 활동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리 감독 체계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영업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들

이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들을 이용해, 관납 조건을 특정 제품에 유리하게 변경할 여지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동일 사업의 관납 조건이 매해 조금씩 바뀌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지점이다. 이는 특정 업체 제품의 독과점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제품의 가격이 몇 배로 오르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 취지가 무색해지고 만다.

뿐만 아니라 ‘도내 생산 제품 한정’이라는 규정 아래 일부 지역에서는 퇴직 공무원이 제품 생산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제품 제조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해당 공장에서 소분하고 가격을 부풀려 판매해도, 축산농가들은 이들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축산농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이 업체로 넘어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관납 지원 대상 제품을 ‘도내 생산 제품’으로 한정, 축산농가의 제품 선택권이 크게 축소되면서 더욱 촉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축산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하기 어려운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도내 생산 제품’에 한정된 지원은 축산농가의 제품 선택권 축소 뿐만 아니라, 특정 공장의 독과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축사 환경개선 제품뿐만 아니라 가축 생산성 향상, 냄새 저감제 공급,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젖소 분뇨 발효촉진 등 다양한 사업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A한우 사육 농가는 “축사 환경개선 제품을 관납으로 구매해도 50%는 자부담이다. 그럼에도 제품 선택 범위를 도내 생산 제품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B돼지 사육 농가는 “내 농장과 맞지 않는 제품을 도내에서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을 통해 관납이 이뤄진 후 비리가 크게 줄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새로운 방식의 비리가 생겨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C축산 전문 컨설턴트는 “낮은 가격의 제품을 더 많은 농가에 뿌리는 식의 현재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 우수한 제품을 관납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라며 “검증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라면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 제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축산경제신문(5월 17일) 한정희 기자

| 현장·단독 |

“보는 것이 곧 영성...‘미디어’로부터 다음세대를 지켜라!”

“이제 밥 먹었으니까 유튜브 조금 더 봐도 되지?” 어머니 A 씨는 매 끼니를 볼모로 스마트폰을 손에 넣으려는 7살 자녀와 하루에도 몇 번씩 실랑이를 벌인다. 그는 “아기 때부터 울거나 떼를 쓰면 아쩔 수 없이 핸드폰을 쥐여준 게 화근인 것 같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개인 폰을 사달라고 조르는 데 어떡할지 고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바야흐로 집집마다 ‘스마트폰 전쟁’이다. 일찍이 영유아 시기부터 미디어에 노출된 요즘 아이들은 불과 초등학교만 돼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형국이다. 유해한 콘텐츠에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까지 피해를지는 건 한순간. 심각할 경우 가족 모두를 과멸로 몰아넣는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한 ‘미디어 과의존’을 자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더군다나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이겨낼 힘은 역부족이다. 가정은 물론 우리 사회와 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낼 방안을 모색할 때다.

스마트기기와 미디어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이 겪는 폐해에 대해선 이미 방대한 연구 자료가 존재한다. 우선, 영유아 시기 과도한 스마트기기 접촉이 과학적으로 정상적인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이 유년기·청소년기·성인기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의 미디어 과의존은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폭력성,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줘 성장기 범죄 가담률을 높이는 주범이 된다고 꼬집는다. 미디어 과의존을 개인



이 아닌 국가 차원의 사안으로 바라봐야 하는 까닭이다.

지난 20여년간 다음세대를 위해 미디어 중독 예방·상담 활동을 펼쳐온 한국교회인터넷중독연구소 소장 김망규 목사는 “미디어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성중독·게임중독·사이버도박 중독 등 다른 중독으로 발달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중독이 더 큰 중독을 낳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디어 중독은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형제 등 한 가족이 붕괴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 그는 “중독은 온 식구를 망가뜨리는 가족병이다. 한창 뛰놀 시기에 학교도 가지 않고 몇 달씩 집에서 은둔하는 자녀들로 고통받는 부모들을 수없이 목격했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어 “크리스천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자녀의 미디어 중독으로 남몰래 속앓이를 하는 교회 중직자들도 많았다”며 “실례로 한 어머니는 ‘살아서 지옥인데 죽어서 천국을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한탄할 정도였다. 미디어 과의존은 영혼을 위협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오늘날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곧 ‘영성’이라고 강조한 놀이미디아교육센터 권장희 소장도 “미디어 과의존은 ‘영적생명’에 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하나님은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언 4:23)고 말씀하셨다.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라며 “이 마음을 지키는 열쇠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에 달렸다. 특별히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미디어는 단지 오락이나 재미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 심겨 말과 행동 심지어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미디어를 통해 자녀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곧 ‘영성’임을 깨닫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 정부가 ‘제5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2022~2024)을 발표했지만, 간판으로 내세운 부모교육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영유아는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규제 조항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는 “한국은 미디어 과의존을 여타 중독 유형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이른 나이의 중독은 평생에 걸쳐 만성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만큼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제공: 기독교연합신문(5월 13일) 김수연 기자

“EDM으로 젊고 활기찬 불교 만들겠습니다”



“젊고 활기찬 불교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해 연등회 야외 디제잉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까지 부캐 ‘뉴진스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맨 윤성호 씨에게 최근 받고있는 대중들의 사랑에 대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 불교신문에서 만난 윤성호 씨는 뉴진스님을 자신의 쌍둥이 형이라고 재치있게 소개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사찰로 오게 하는 것이 뉴진스님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의 스님 캐릭터는 작년 탄생했다. 지난해 연등회 연등놀이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파티 때 ‘일진스님’으로 분해 디제잉한 것이 계기였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해당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며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관심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불교신문 사장 오심스님으로부터 새롭게(New) 나아간다(進)는 뜻의 ‘뉴진’이라는 법명을 받은 그는 지난 4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뉴진스님으로 디제잉 무대에 올랐다. 이 때도 각종 SNS에 ‘세상 힙한 불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도 뉴진스님의 공연 영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윤성호 씨는 “뉴진스님을 모시고 5월2일 말레이시아로 떠난다”며 홍콩, 마카오 등에서도 불교 EDM 공연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포교’를 이어간다고 소개했다.

미래세대 전범, 포교가 불교계 화두인 지금, 그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윤성호 씨는 뉴진스님의 말을 빌려 말했다. “세상 살만큼 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 찾는 곳이 사찰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이 있더라도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사찰과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뉴진스님이 ‘불교는 엄숙하다’는 편견을 깨는 데 기여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불교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과 호기심을 ‘뽕’ 하고 터뜨려 준 일종의 촉매제 같은 거죠.”

그는 문화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사례를 들어 언급했다. “재밌는 불교를 만들기 위한 기획이 바탕이 됐기에 뉴진스님 또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초콜릿 붓다를 비롯한 신진 작가들의 재치 넘치는 작품부터 출가상담부스까지 불교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으로 불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했던 것이 이번 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같습니다.” 그는 또한 2021년 불교신문 홍보대사로 위촉돼 미디어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윤성호 씨는 “뉴진스님의 역할은 전범 포교에서 일부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뉴진스님은 사람들을 사찰로 이끄는 역할”이라며 “마음을 편안케 하고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로 인도하는 역할은 훌륭한 스님들이 하실 일이다”라고 말했다.

불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찐불자’가 됐다. 어머니와 함께 사찰을 찾아 참배하곤 한다는 그는 마음이 공허하거나 충전이 필요할 때 법당에 앉아 좌선도 즐긴다고 했다.

그는 ‘제행무상’을 언급하면서 모든 것이 고정돼 있지 않아 짐작할 바가 없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인생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2001년 SBS 공채 6기 개그맨으로 데뷔해 어느덧 23년째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에 전착해오고 있는 윤성호 씨는 뉴진스님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원동력은 멈추지 않는 ‘도전’이다. 큰 키에 날씬한 체형의 그는 사실 모델로 경력을 시작했다. 20살부터 약 2년간 광고모델 등으로 활동하다가 남을 웃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개그맨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도전을 감행했다. 이어 그의 대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뽕구’ 캐릭터로 사랑받기까지 KBS로 이적하는 또 한번의 결심이 있었다. 그는 “다른 집 식구라는 편견과 뒷세를 극복하기 위해 몇 배는 더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뉴진스님 ‘아이덴티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제잉 또한 10년간 갈고 닦아온 비장의 무기였다.

2018년 인생 2막을 설계하며 중국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던 그는 다방면에서 흥미를 느끼고 도전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했다. “인간을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뭐든 익숙해지면 쉬워 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구간을 지나면 실력이 ‘뽕’ 터지는 때가 옵니다. 이런 성취들이 모여면서 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제공: 불교신문(5월 13일) 이도열 기자, 장용준 기자

언론인 대상 취재보도 관련 법률상담·자문 서비스 시행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재단)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자문을 5월 10일부터 실시한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

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단,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이혜은 변호사 02-6200-1740, hoyi@jipyong.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

재단은 언론인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감소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적법성, 윤리성과 함께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문화데이터 활용한 혁신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문정원)과 함께 오는 7월 15일까지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열고 문화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및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찾는다.

올해 공모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합해 진행한다. 공모는 △우수사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은 디지털혁신과 문화데이터 등 2개 분야로 구분해 모집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단위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데이터 분야 참가 신청자는 문체부 산하 및 소속기관의 데이터 또는 문화 공공데이터 광장,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참가자는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



(www.culture.go.kr/digicon)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심사 등 전문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8월에 부문별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총 25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 개인 또는 단체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과 상금 총 6,800만 원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 데이터 분석 부문은 청소년부(13~18세)와 일반부로 나누어 시상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에 익숙한 중·고등학생의 수상 기회를 확대한다.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의 문화데이터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문체부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공모전 시상식은 '2024년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예정)'과 연계해 개최한다. '문화디지털혁신포럼'에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뿐만 아니라 문체부 산하기관의 우수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문화 분야별 토론회를 통해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특수교육대상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운영학교 실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재단)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원장 홍만표)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간 '특수교육대상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운영학교'를 실시한다.

재단은 지역의 정보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뉴스리터러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올바른

정보판별, 사이버 윤리 등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분평초등학교, 충주남산초등학교, 오송중학교, 청주성신학교, 충북반도초등학교, 제천제일고등학교, 산남고등학교 등 충청북도 소재 13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내 15개 학급이 참여한다.

청소년들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험할 글짓기 대회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대희, 이하 위원회)와 함께 오는 7월 8일까지 '제20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케이(K)-콘텐츠의 이용자이자 미래 창작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창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글짓기 대회를 열고 있다.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저작권을 소재로 자기 생각을 담은 1,000자~3,600자 이내 글을 작성해 접수 기한 내에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영상물에 익숙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영상 부문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영상 부문 공모에 참여하려면 저작권을 소재로 창작한 20초 이상 3분 이내 길이의 영상물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글짓기 부문은 개인별, 영상 부문은 개인별 또는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저작권 공모전' 누리집(www.copyrightcontest.com)을 통해 7월 8일(월)까지 온라인으로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접수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 표절 검사, 국민 사전 검증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총 46편을 선정해 11월



에 발표·시상할 계획이다. △글짓기 부문 대상 1명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장학금 100만 원, △최우수상 글짓기 부문 3명, 영상 부문 1명(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장학금 50만 원, △우수상 글짓기 부문 3명, 영상 부문 1명(팀)에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과 장학금 20만 원 등을 각각 수여한다.

또한 글짓기 부문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별상 1명을 선정해 장학금 30만 원을 수여한다. 우수 지도교사도 선정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과 함께 상금 40만 원을 수여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은 9개 수상작의 저작권 등록을 지원한다. 수상작 46편에 대한 작품집도 발간해 학교에 배포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3년 문화정보화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주관하는 '2023년 문화정보화 수준평가'에서 소속 공공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23년 문화정보화 수준평가는 문체부 산하 48개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성과 관리 대응, 문화정보화 전반의 수준 향상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2

월부터 4개월 간 진행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 문화정보서비스 활용 수준 등 5개 영역이다.

2022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는 재단은 올해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한 뉴스데이터 검색 기반의 대화형 질의응답 서비스인 빅카인즈 AI와 뉴스콘텐츠 공유인프라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한등급 높은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또한 문화정보화 인적역량 개

발 노력, 정보자원 관리 수준, 정보화 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 수준, 문화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만점을 취득했다.

김효재 이사장은 "언론재단은 미디어 교육, 정부광고, 언론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축으로 국민과 언론을 위한 정보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보보안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재단에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조선의원 의정연찬회 개최… 의정활동 준비 본격 돌입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조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상호 친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국회 조선의원 의정연찬회’를 지난 21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제22대 국회 조선의원 당선인 13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기능 및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사무처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주요 개원 행사 중 하나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와 오찬을 통해 축하인사와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조선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전자투표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안내는 조선의원의 의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회운영 분야 △국회의원 지원제도 및 국회시설 분야 △의회의외교활동 분야뿐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더 높아져 이번 연찬회에서 신설된 △미디

어 소통 분야 △공직윤리 분야가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로 45분간 특강을 진행해 인구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을 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의정연찬회를 통해 제22대 국회 조선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수준 높은 의회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순직해병 특검법’ 등 5건의 안건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5건 가결, 0건 부결)의 안건을 지난 2일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5건 중 주요 안건 3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2년 발생한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가 같은 달 30일 대통령이 재요구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반영해 쟁점을 해소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

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결=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청와대 개방 2주년, 종합예술공연 ‘블루하우스’ 선보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 이하 재단)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퍼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본관 중앙 로비에 마련한 비디오파

트 작품을 감상한 후 배우들의 율동과 경쾌한 음악에 따라 본관 곳곳을 탐험하며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총 45분간 펼쳐지는 공연은 청와대 누리집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다. 현장(청와대 정문)에서도 30명에 한해 당일 오후 7시 50분까지 신청 받는다. 본 공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본관 2층 집현실에서 미니콘서트(10분)도 열린다. 미니콘서트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블루하우스’를 기획하고 연출한 강낙현 감독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흥미롭게 조합하고 도전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유머러스한 분위기 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말했다.

유네스코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 이하 교육진흥원)과 함께 5월 21일(화)부터 27일(월)까지 ‘2024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전병극 제1차관은 5월 21일, ‘2024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에 참석해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의 시작을 축하하고 세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을 격려한다.

올해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여는 내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2024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 △‘제4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2024 ‘꿈의 향연’ 공연, △2024 치유도 예술로 연수회(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올해 행사는 5월 21일과 22일, 정동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에서 ‘2024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으로 시작한다. 한국과 미국, 독일, 핀란드, 몽골 등 5개국 전문가들이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국제 현안과 국내 현장의 접점을 논의한다.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대



한민국이 ‘프레임워크’의 후속을 논의하는 장을 제일 먼저 마련해 문화예술교육 선도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일 예정이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행사도 마련했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5. 21.~27.)에 전국 37개 지역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동시 공연 프로젝트 ‘2024 꿈의 향연’이 펼쳐지고 △전국 21곳에서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상에 지친 국민들이 문화예술로 마음 건강을 치유하는 대국민 예술 치유 연수회 ‘2024 치유도 예술로’가 열린다.

한국계 인사 최초 도서 부문 풀리처상 수상한 우일연 작가에 축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지난 9일, ‘주인 노예 남편 아내’로 2024년, 한국계 최초 도서 부문 풀리처상을 수상한 우일연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인촌 장관은 “우일연 작가는 역사와 인간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과 탁월한 문장력을 선보이며 수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라며 “끊임없는 고뇌와 열정으로 빛어낸 값진 결실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라고 축하했다. 아울러 “우일연 작가가 앞으로도 시대를 통찰하는 날카로운 시선과 문장으로 오래 사랑받는 작가가 되기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풀리처상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전미도서상 등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이다. 우일연 작가는 미국 국적의 한인 2세로, 2010년 「위대한 이혼」으로 문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 풀리처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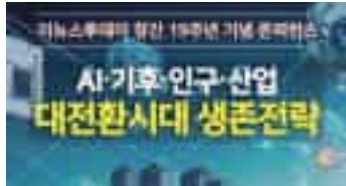




회원사 동정

이뉴스투데이

창간 19주년 기념 컨퍼런스



이뉴스투데이(발행인 방재홍)은 오는 6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창간 19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AI기후·인구·산업 대전환시대 생존전략'이다.

참석대상은 정·재계 인사 및 기업 홍보·마케팅·기획·인사·IT 담당자 등이다. 참가비는 사전등록 25만원, 현장등록 30만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이뉴스투데이 컨퍼런스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23-8542

장업신문

화장품 산업 미래화두 '글로벌' 세미나

장업신문(발행인 이관치)은 오는 5월 30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화장품 산업의



미래화두 '글로벌'-K뷰티 글로벌 시장우위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업신문과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국제전시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장업신문 창간 30주년 및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과의 세미나 공동 개최 10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전 세계 화장품 시장 4위에 오른 국내 화장품 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K-뷰티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정책 발표는 물론 DX혁신 전략과 글로벌 동향, 해외규격인증 변화 대응방안, 해외 수출입 동향을 통한 시장 공략 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문의: 02-2636-5727



제21회 화장품 마케팅 세미나

주간신문CMN(발행인 조병호)이 창간 25주년을 맞아 오는 5월 29



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제21회 화장품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COSMO BEAUTY SEOUL)' 기간 중 열린다.

세미나 주제는 '다시 세계 무대로...진격의 K-Beauty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해법을 찾아라'다.

1강 미국은 조현대 잉글우드랩코리아 대표가 '2024 North America Cosmetic Trend & Keyword'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2강 일본은 공준식 글로우데이즈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선다. 'K뷰티를 위한 애크스메(@cosme) 활용 A to Z'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3강 동남아는 노장서 (사)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 원장이 강연한다. 강의 주제는 '몸집커지는 할랄화장품 시장의 진원지 동남아시아'다. 4강 중국은 스타포스 이정아 팀장이 강연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신문CM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628-5454

철도경제

제2회 철도인 한마음 오픈대회

철도경제신문(발행인 백용태)이 오는 6월 14일 코스카 컨트리클럽에서 '제2회 철도인 한마음 오픈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철도인이면 누구나

임현택 호 공식 출범 “의료·교육농단 바로잡는 시작”

의협신문

의협신문을 발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저녁, 3월 25~26일 양일간 진행된 의협회장 결선투표 개표결과를 공개했다.

결선 최종 투표율은 65.28%. 역대 의협선거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지난 1차 투표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로, 전체 전자투표 선거인단 5만 681명 가운데 3만 3084명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후보별 득표율은 임현택 후보 65.43%, 주수호 후보 34.57%로 최종 집계됐다. 각 후보별 득표 수는 임현택 2만 1646표, 주수호 후보는 1만 1438표다. 역대 의협 회장 후보 가운데 '2만표'의 벽을 넘은 것



은 임 당선인이 처음이다.

이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회무에 돌입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임현택 회장을 비롯, 모두 40여명 규모의 의협 새 집행부 임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임 회장은 “의료농단이 자 교육농단을 바로 잡는 시작은, 바로 오늘 42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라고 강조하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냈다.



참여할 수 있다.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열리며 각 우승자에게는 우승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이 수여할 예정이며, 각 준우승과 메달리스트도 시상

할 계획이다. 더불어 참가자 전원에게 행운권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협회,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철도시설협회,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 한국철도건설협회 등이 후원한다.

문의: 02-720-6644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sna.or.kr



회장·발행인 김광탁 명예회장·편집인 박두환 편집고문 김시중

부회장 함정기 김관홍·정재환·김종철 | 상임고문 방재홍
이사 이근호·박연준·강현욱·김종규 | 감사 백용태·오경섭
홍준·방두철 | 고문 함용현·김시중·유태우·이덕수·양영근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1964@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한국씨티에스

34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34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H)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50-1, 2층
Tel. 관리부 02) 362-1199 / 영업부 02) 362-6677 / 전산실 02) 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부일로 815번길 58-67 (문수동)
Tel. 02) 2684-3377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34년 전통 인쇄 기술력



차별화된 시스템

2024년 4월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간: 2024.04.01.~2024.04.30.)

등록번호	제호	회사명(법인명)
경기 다50782	예장백석대신신문	예장백석대신신문사
경기 다50780	환경보건뉴스	환경보건뉴스사
경기 다50781	녹색환경저널	녹색환경저널사
울산 다01111	권익복지신문	권익복지신문사
전북 다01324	매일전북신문	(유)매일전북신문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기타 사례

2022서울조정540, 541 각 정정청구

부고(訃告) 기사와 관련, 유족이 문제 삼은 고인의 경력 일부를 열람차단하고 알림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사립대학교 총장을 지낸 고인의 부고기사를 내보내면서, 고인이 1900년 A 대학교 임시이사가 된 뒤 대학 설립자에게서 학교를 인수했다는 등의 경력을 보도했다.

□ 신청이유

고인의 유족인 신청인은 학교법인 A 학원의 명칭은 설립자인 고인이 19△△년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처음 사용한 것임에도 1900년부터 A라는 명칭을 사용한 대학교가 설립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이후 인터넷 기사를 한 차례 수정했고, 보도 분량 및 그 표현방식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며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인터넷 기사 본문 중 신청인이 문제 삼은 부분은 열람차단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학교법인 A 학원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인지 여부를 두고 고인과 A 학원 등 사이에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간신문에 정정보도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재부는 신청취지가 부고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학교법인(법인격)과 해당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대학(법인의 목적사업)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살펴봄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 판결문에 기초한 알림보도 게재 등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는 인터넷 기사 본문 중 신청인이 문제 삼는 표현 일부는 열람차단하고, 판결문의 문구를 인용해 인터넷신문에 알림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불교신문

동자승 컬러링 100

불교신문(발행인 진우스님)을 발행하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발간한 '동자승 컬러링 100'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색칠하는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심플하고 아름다운 도안이 돋보이는 컬러링 책이다. 불교 그림작가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글과 그림으로 전하는 용정운 작가가 수년간 그려온 '동자승' 그림 100개를 컬러링하기 좋게 도안으로 다듬어 한 권에 담았다.

펼치는 페이지마다 함박웃음을 짓게 하는 동자승들의 모습이 가득하다.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 아무 페이지에서든 채색하면 된다. 중간중간 작가가 색을 입힌 채색본 10장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지만, 꼭 그것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자유롭게 색칠해보자. 하늘, 바닥, 벽면, 배경 등의 여백에 그리고 싶은 것을 직접 그려 넣어 자신만의 동자승 그림을 완성해가는 재미도 이 책이 가진 매력이다.

가격: 19,000원 / 문의: 02-2031-2070



화광신문

행복의 봄

화광신문(발행인 정재환)이 발간한 '행복의 봄'을 소개하고자 한다.

"진실한 행복의 꽃은 인내라는 대지에 서 핀다. 인내 없는 행복은 덧없는 허영처럼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나는, 여러 고난과 맞서 싸우는 벼를 최대한 격려하고 싶었다. 때때로 수필과 시를 써서 선사하는 것도 그러한 바람에서이다."(본문 中)

이 책은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이 여성에게 보내는 신념과 따뜻함이 담긴 수필집이다.

총 6장으로 6편의 시와 30편의 수필로 구성됐다. △제1장 청춘 △제2장 부부 △제3장 부모와 자녀 △제4장 가족 △제5장 삶의 자제 △제6장 사회.

화광신문은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이 '여성'에게 보내는 격려가 담긴 서적인 만큼, 주변 지인에게 서적을 선물하며 '행복한 여성의 연대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격: 8,000원 / 문의: 02-3282-1825



■회원사 발행인 칼럼 | 팜앤마켓 최서임 발행인

직장인 월급 올랐듯이
농업인의 소득도 올라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다양성과 개개인의 삶은 극진하게 존중하면서도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존중의 자세가 없다.

농산물 가격을 “금값이다, 다이아몬드다, 민심 얻기 도구”라든지 하나같이 언론들이 “본인의 월급은 올랐으면서 농업인의 소득은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심보를 가졌을까?” 생각이 들곤 한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올라서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골병만 들었다. 대형유통업체는 인건비가 오르니 농산물 가격을 올려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경영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이 취직해야겠다는 생각에 4년

동안 스펀이 될 수 있는 자격증도 획득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배웠는가?” 생각했다. 대학 4년 동안 배운 경영학 지식보다는 아버지의 농사였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운 농업을 선택했다고 농업인은 말했다.

우리의 농업현장에는 학사 출신도 많고 심지어 박사들도 많다. 우리들이 빌딩 속 직장을 선택해 월급을 받듯이 농업인들도 안정적인 소득이 되는 농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 일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농사지를 사람도 없는데,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마치 내일 당장 못먹을 정도 비싼 가격인 양 “수입하라”며 호들갑이다. 50도가 넘는 비닐하우스에서 단 1초라도 일해보고 농산물이 비싸다도 말해보라.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대안 없는 비난만 하지 말고, 농업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을 존중하는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어야 한다.



6월 창간기념일을 축하합니다

6월1일(1971년) 코리아슈핑가제트

6월21일(1966년) 보건신문

6월15일(1995년) 원예산업신문

6월27일(1996년) 한국임업신문

6월16일(2008년) 농기자재신문

hshop 화광신문사 인터넷 쇼핑몰
www.hkshop.kr

세계의 양식, 세계의 양심, 휴머니즘의 화광신문사

生命
생명



언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영광을 지향하는 메신저, 화광신문사는
희망언론, 행복언론, 평화언론의 정신으로 21세기를 인간주의의 세기로 이끌어 갑니다.
세계 독자와 함께하는 화광신문은 확고한 철학과 행동으로
독자들의 든든한 행복지킴이가 되겠습니다.



152-09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평로 188
tel 02-8952-2121 / fax 02-8952-7982

h 화광신문사